

제107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계획

□ 일시·장소 : '24. 8. 19.(월) 15:00~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(별관 4층)

□ 참석 대상

- 해양경찰위원회 : 길태기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
- 해양경찰청 : 차장, 기획조정관, 안전 소관 국·과장 등

□ 상정 안건(심의의결 10건)

[심의·의결 10건]

연번	형식	안 건 명	주 요 내 용	부서
1	고시	「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」 전부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속요원 처우 개선을 위한 나포 포상금 상향(최대 100만원→160만원) 및 포상금 지급 유형 세분화* ※ (주요내용) △ 중대위반 불법조업(최대160만원), △정선명령 불응 등(최대 100만원), △ 그 밖에 재한조건 위반(최대 80만원) • 변화된 단속 환경(단독 작전→다수 세력 참가)를 반영한 포상금 배분 기준 명확화 • 포상금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포상금 사용례 구체화 등 개정 	경비 작전
2	훈령	「함정 운영관리 규칙」 전부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변화된 경비정책을 행정규칙에 반영 ※ (주요내용) △표준일과표 개편(운영 재량권 부여), △항해 당직관 보직기준 마련(해기사 면허 보유자 등) 등 • 당직휴무 사용기간 현실화 ※ (기존) 근무 종료 후 공휴일 제외 10일 내 사용 (개선) 공휴일·해상종합훈련일·평일휴무일 등 제외 10일 내 사용 • 함정 대외지원 기준 강화 ※ (내용) 경비활동 지장 초래, 대체수단 있는 경우 지원불가 원칙 	
3	고시	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주광역 VTS 개국('24.9월) 관련 관제구역·호출 명칭 및 관제통신 채널을 신규 지정 • 현장 실정에 맞도록 관제통신 개선 ※ (내용) 도선선이 도선사 승·하선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, 현장 실정에 따라 도선선 이동신고 면제 가능 • 행정규칙 내 관제구역 표기방법에 시각자료 추가 ※ (기존) 경위도 좌표 → (개선) 경위도 좌표 + 관제구역도 	해상 교통 관제

연번	형식	안 건 명	주 요 내 용	부서
일 괄 상 정	4	고시	「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	해상 교통 관제
	5	훈령	「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	
6	훈령	「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VTS 통합플랫폼 연구에서 개발된 데이터 표준을 향후 도입되는 시설·장비에 적용하도록 개정 	수색 구조
7	부령	「수상구조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민간 수난구조 참여자 활동비를 참여자 직업을 감안, 선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(약 8% 인상) ※ (기존) 78,880원(산출기준 : 최저임금 x 8시간) (개선) 85,360원(산출기준 : 선원 최저임금의 1일 급여) 	
8	훈령	「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 도입위원회 운영규칙」 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구조·구급 장비 도입 관련 주요사항 선정·심의·평가를 위한 ‘장비도입위원회’ 규정 마련 ※ (주요내용) △위원회 설치 및 기능, △위원회 구성 및 위촉 등 	
9	고시	「(해양경찰청)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」 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·시행 (9.20)에 따른 공로자 보상 관련 추가사항 규정 ※ (주요내용) △공로자 등 용어의 정의, △관서별 주무부서 지정, △보상금심사위원회 설치, △보상금 기준, △보상금 지급방법 등 규정 	수사 기획
10	훈령	「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」 일부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무선전화 운용일지 작성법 개정(수기 → 전자적 방식) · 해양안전통신국 송·수신소에 대한 파·출장소장 순찰 (주 1회)을 폐지하고 관할 해경서·지방청에서 점검(월 1회) · 태풍·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상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인접 해경서 정보통신계의 지원 조항 신설 	정보 통신